



건설협회 도회 전·현직 사무처장 회의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6일 춘천시 동면 도회 사무처에서 전·현직 사무처장 회의를 열고 협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철도 고속철도로 업그레이드

국토부, 철도발전 계획 확정
2020년까지 시속 250km 개량
수도권~강릉간 1시간여 소요

강원도내 일반철도가 2020년까지 고속화철도로 업그레이드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내 일반철도의 고속화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3차 기본계획에는 철도운영과 건설,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과제가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철도 건설로, 시속 400km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상용화와 함께 도내 철도가 포함된 일반철도의 시속을 200~250km급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고속화 계획에는 서해선(236.7km), 중



양선(427.6km), 경전선(358.8km), 원강선(280.5km), 중부내륙선(221.3km), 경강선(205.4km) 등 6개 철도가 포함됐다. 이 중 도내에는 청량리~서원주~제천~울산 태화강을 잇는 중앙선과 원강선(청량리~서원주~강릉), 경강선(서울수서~경기광주~여주~원주~강릉)이 포함됐다. 중앙선과 원강선의 경우 최대 시속을 250km까지, 경강선은 시속 200km급으로 개량된다. 이미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준고속철도를 기본으로 하게 되며 나머지 노선은 궤도 개량 등을 통해 고속화로 전환된다.

특히 고속화철도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 승강장 및 스크린도어 등 시설도 개량된다. 정부의 일반철도 고속화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전지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남짓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철도수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으로 기업 유치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고속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8월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철도 건설 및 운영 관련 제반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은복 rio@kado.net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7일

오후 3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열리는 강원권 건설안전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한다.

건협 강원도회, 전·현직 사무처장 회의... 협회 발전방안 등 논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6일 강원도회에서 전·현직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오인철 도회장은 7일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리는 '강원권 건설안전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평제의 그늘... 지역중소사 진입장벽만 높아

최저가낙찰제 '등급공사' 사라져... 입찰참가 기회 사실상 막혀
수요기관 대부분 지자체 불구 지역업체 몰락가뭄 갈수록 심화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중평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전 최저가낙찰제 시절 등급 공사가 중평제로 바뀌면서 사라진 까닭이다. 특히 이들 공사의 수요기관이 대부분 지자체인데도, 결과적으로는 지역 중소기업의 몰락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추정금액 410억원 규모의 '오송2단지 진입도로(국도1호선 연결)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했다. 수요기관은 충청북도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다.

입찰(4월11일)까지는 두 달여가 남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 역시 대표사 출정을 업무로 내지 못하고 지역의 무공통도급(49%) 참여에만 집중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사가 중평제 적용 대상으로 등급 공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과거 최저가 시절부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통해 시평액에 따라 등급(1~7등급)을 나누고, 입찰공고 시 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참여를 유도했다. 관투로 치

면 제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오송2단지 진입도로 공사의 경우 최저가로 발주됐다면 4등급(시평액 500억~300억원) 공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찰제도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는 등급 공사로 발주하는 반면,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중평제에서는 등급 공사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저가 시절에는 지자체의 발주대행을 하더라도 조달청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적용해 등급 공사로 발주할 수 있었지만 PQ가 없는 중평제는 다르다"면서 "이제는 수요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이상 중평제 적용 공사는 등급 공사로 발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평제의 적격성 심사 기준도 문제다. 오송2단지 진입도로의 경우 대표사로 참여하려면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액이 대략 3000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00억원 이상의 토목실적을 가진 4등급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희훈기자 hoony@ 2면에 계속



국가안전대진단. 첨단 건설장비 살펴보는 박인용 장관
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우남역푸르지오 건설현장에서 열린 2017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맨 오른쪽)이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및 공동을 탐사하고 응속 및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하는 콘크리트 초음파 토모그래피를 살펴보고 있다. **황**

1면서 계속 = 중평제의 그늘 지역중소사 진입장벽만 높아

이 같은 문제점은 중심제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9월 중심제로 입찰을 실시한 국토부 직산지방 국토관리청 수요의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용진-우이' 건설공사(추정금액 589억원)는 3등급 공사로, 당시 83개 3등급 업체들이 경쟁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중평제로 입찰한 전라남도 수요의 '함군-진상 간 국가 지원지반도 확포장공사(추정금액 627억원)'에는 54개사가 참여했고, 참여사들도 대부분 1등급 업체들이었다.

비슷한 금액의 공사가 중심제로 발주되느냐, 중평제로 발주되느냐에 따라 입찰환경이 확 달라지는 셈이다.

A지역의 4등급 업체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우리가 대표사로 나서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이끌고 들어왔으나 이제는 우리마저 공동도급 참여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 뒤 "중평제 적용 공사의 수요기관이 대부분 지자체임을 감안할 때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등급 공사를 부활하든지 이에 준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몰락 감소는 인정하지만 연행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행사주와 협의에 나선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인건비 부담 줄어

800억 이상 공사 안전관리비 9.04% 올라
년690억 추가 확보... 낙찰률서 배제 검토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9.04% 오른다.

또 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에서 배제하거나 요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연말까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쓰이는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주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된

다. 하지만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2015년부터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건설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준이 현행보다 9.04% 인상된다. 일례로 1000억원짜리 토목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기존에는 안전관리비 요율 1.97%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15%가 적용돼 안전관리비 1억26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로써 건설업체는 더 많은 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게 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김광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정 고시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 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다.

또 용접 등 화기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공사에 선임하는 '검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에서 배제하거나 이 방안이 무산될 경우 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준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곧 착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